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광주 난임 증가

인구절벽시대

출생률이 0%대를 기록한 인구 절벽 시대. 결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광주 난임 환자 수는 4년 새 300여 명이 늘었다.

난임 환자는 수백만 원이 드는 시술에 경제적 부담과 수정 실패에 따른 우울에 직면해 있다. 치료를 위한 짚은 조퇴·휴가 문제로 직장 생활 고충도 토로하고 있다.

◆늦어지는 결혼...광주 4년 새 난임 환자 300여명 늘어

12일 통계청 '2023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광주 1분기(1~3월) 출생아 수는 1787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명이 나 준 수치다. 합계 출산율도 한 명이 채 안 되는 0.82명에 그쳤다. 반면 최근 4년간 난임 시술 환자는 약 3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시술비도 30억 원 증가했다.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살펴보면, 광주 난임 시술 환자·시술비는 ▲2018년 6162명·75억4354만 원 ▲2019년 6042명·80억2941만 원 ▲2020년 6228명·91억5225만 원 ▲2021년 6487명·101억9061만 원이다.

국내 난임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25만 2288명으로, 2017년(20만8703명)과 비교해

광주 난임 시술 환자 4년 새 300명 늘어

‘수백만 원’ 난임 치료 경제·심리 압박 커 짚은 진료에 퇴사까지 직장 고충도 토로

20% 이상 늘었다.

대표적인 난임 배경으로는 결혼 연령이 증가에 따른 늦은 가임율, 뒤늦은 난임 치료가 꼽힌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2년 한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다. 가임 확률이 높은 시기는 20대이지만 첫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평균 연령 나이는 33세인 것이다.

◆시술 한 차례에 수백만 원, 임신 실패에 스트레스도

“짚은 호르몬 주사로 몸은 아픈 데다 연이은 수정 실패,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김모(44·여)씨는 결혼 이후 임신이 안 돼 7년 뒤인 38살부터 난임 치료를 시작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효과는 없었다. 고령을 고려해 내년 마지막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있다.

짚은 주사와 치료는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했다. 시술 전 많은 난자를 추출하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 배엔 매일 시퍼런 멍 자국이 남았다. 살도 급격히 쪼고 온몸이 부었다.

“조급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임신의 압박은 커졌다.

자궁 상태를 점검하러 병원을 찾을 때면 기계적이고 쌀쌀맞은 진료 태도는 그를 더욱 위축하게 했다. 가끔은 좌절을 경험한 난임 부부를 보듬어 줄 따뜻한 격려도 필요했다.

김씨는 “처음엔 잇따른 실패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시술당 100만 원 정도 정부 지원을 받지만 비급여 진료가 많아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인공수정 한 달에 10차례 진료’ 눈치 보여 퇴사

“조퇴도 한 두 번이지, 진료를 가야 할 때면 동료와 회사 눈치가 보여요.”



조모(42·여)씨는 몇 해 전 두 번째 자녀 계획을 위해 회사를 그만 뒀다.

인공수정을 위해선 수정 전후 여러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짚은 내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배란 유도·자궁벽 확인·수정·수정 이후 피검사 등 과정을 거치며 한 달에 5~6차례, 많게는 10차례 병원을 찾아야 했다.

진료를 위해 매 주 1~2시간 조퇴하면 남은 일을 대신 해야 할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 시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이틀날 쉬지 않고, 하루만 휴가를 썼다.

조씨는 결국 인공수정을 시도한 지 1년 반 만에 퇴사했다. 반년 이후 수정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조씨는 “정부가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회사가 배려한다고 해도 직장인은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시술을 받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슬비기자

18~59세 41%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노후빈곤 부른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대인 18~59세 중 40% 이상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 힘 김미에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30에게 듣는다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국민연금 제도 및 개혁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인구 3088만 명 중 40.9%가 공적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다. 27.6%는 적용제외자, 10%는 납부예외자, 3.3%는 장기 체납자다.

유 박사는 “이 같은 적용 사각지대는 무연금 또는 저연금 등 급여 사각지대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약 1210만 명 중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는 43.9%인 531만 명 뿐이다. 2022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 58만5000원이다. 1인 가구 적정생활비가 177만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액이 적다.

유 박사는 근시안적 특성을 지닌 개인의 자발적 결정에 맡길 경우 대량의 노인빈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의 근로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공적 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부도 위험이 거의 없고 물가·임금상승률과 연동해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소진된다. 소진 시점은 2018년에 발표한 제4차 재정계산때보다 2년 앞당겨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지속가능성이 낮아졌다”며 “보험료만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청년을 위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달라”며 “국회도 개혁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학교폭력, 올해 1~5월 '709→930건' 급증... “대면수업 재개 영향”

전교조광주 “시교육청 지원 대책 서둘러야”



코로나19 이후 광주지역 일선학교가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5월 기준 학교폭력전담기구 신고접수는 총 930건으로 지난해 709건에 비해 221건(31%) 증가했다.

1월 66건, 2월 16건에서 개학 이후인 3월 253건, 4월 281건, 5월 31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1월 46건, 2월 15건, 3월 122건, 4월 255건, 5월 271건이 접수됐다.

동·서부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277건으로 지난해 167건보다 110건(66%) 늘었다.

1월 84건, 2월 26건, 3월 12건, 4월 61건, 5월 94건 등 총 277건이며 지난해는 1월 51건, 2월

21건, 3월 2건, 4월 33건, 5월 60건 등 167건이었다.

올해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큰 폭으로 증가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현장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고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현장 책임교사의 업무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이점선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용일기자

수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